

## 세계화와 불평등 - 歷史的 眺望\*

梁 東 傑

최근 세계 경제의 불평등도는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불평등을 세계화와 연결시켜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말 이후의 대량이민과 노동시장 통합, 이에 따른 賃金收斂 현상을 살펴본다. 노동이동이 없어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상품가격이 國際價格으로 통일되면 장기적으로 나라별 생산특화가 이루어지고 요소가격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19세기 말에 구세계 유럽과 신세계 미주 및 대양주 간에 이러한 과정이 두드러졌다. 즉 구세계에서는 국가 내 불평등이 완화, 신대륙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20세기 말 세계화의 '2차 물결' 때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요소가격 균등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기술진보 속도의 차이와 기술전파의 정도와 관련하여 國家間 不平等 問題를 다룬다. 또한 최근 오프쇼어링의 팽창이 노동시장에 의미하는 바를 가늠하며, 세계화가 福祉國家의 정책, 즉 저소득 집단의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가설을 살펴본다.

### 1. 머리말

최근 세계 경제의 불평등도는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세계화(경제적 차원에서는 상품 및 요소시장의 지구적 통합경향)의 결과로 간주하여 反世界化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진 공업국의 예를 들면, 2001~2006년에 미국의 평균적인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물, 가구 등 멕시코나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최고 경영자의 보수는 평균 임금의 40배에서 110배로 올랐다. 기술 진보와 시장 통합의 결과로 얻어진 호황의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된 것이다. 부유한 나라의 GDP에서 勞動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상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의 노동이 무역을 통한 저개발국의 값싼 노동자와 경쟁하거나, 혹은 미숙련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에 기인한 世界化 後退(backlash)의 징조가 많이 보인다. 간헐적인 시위와 폭동 이외

\*본 연구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인과를 열거할 수 있다. 미국 하원에서 2005년 한 해에만 중국을 겨냥한 保護主義 입법이 27개나 시도되었다. 미국 회사들 가운데 여론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自由貿易을 지지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자기 회사만은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회사가 절반 이상이었다. 노동 운동이 과격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 하원은 10년 만에 연방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불평등과 임금 정체,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유럽도 중국과의 직물 교역을 관리하는 데 여념이 없다. WTO 차원의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는 진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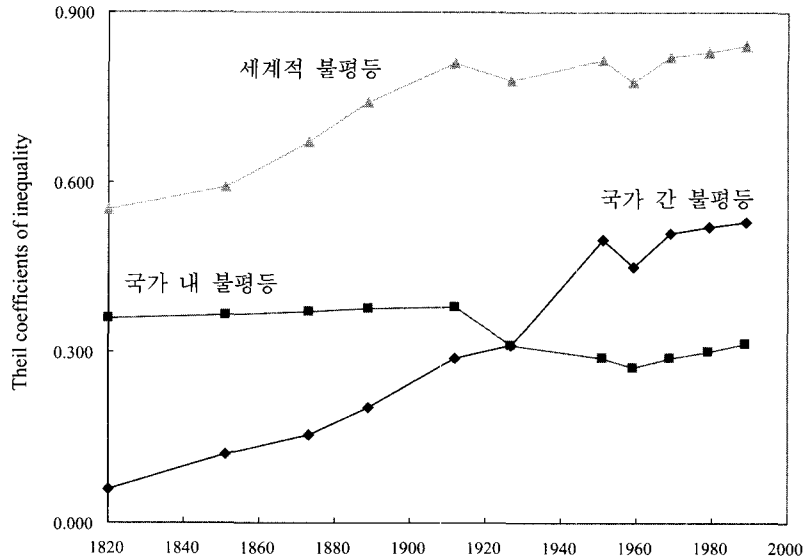
低開發國에서 未熟練 勞動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이므로 무역의 효과에 의해 이들의 相對賃金이 상승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NAFTA 직전의 멕시코나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다른 저개발국들에서도 지난 30년간 가구조사에 관한 자료를 보면 숙련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世界化가 저개발국에서도 兩極化와 不平等을 수반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든 나라의 미숙련 임금이 중국 수준으로 하향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나 중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평등도가 계속 높아졌다. 이것은 아마도 자본이동과 자본-숙련노동 간 보완성, 미숙련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노동시장의 이동성 및 유연성이 결여한 것과 관련될 것이다.

國家間 不平等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가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면 국가간 소득이 수렴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생산성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단지 최근 들어 중국과 인도의 고속성장에 의해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속도는 줄어들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내, 국가 간, 그리고 세계적 불평등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년간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불평등도가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가 세계화 때문이고, 어느 정도가 다른 요인 때문인지 따져 보기로 하자. 不平等을 世界化와 연결시켜 歷史的으로 眺望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본문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말 이후의 대량이민과 노동시장 통합, 이에 따른 임금수렴 현상을 살펴본다. 노동이동이 없어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상품가격이 국제가격으로 통일되면 장기적으로 나라별 생산특화가 이루어지고 요소가격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19세기 말에 구세계 유럽과 신세계 미주 및 대양주 간에 이러한 과정이 두드러졌다. 20세기 말 世界化의 '2次 물결' 때는 선진국



資料: Lindert and Williamson(2003, p. 230).

〈그림 1〉 個人所得의 世界的 不平等度, 1820~1992

과 저개발국 간 요소가격 균등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해 제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國家間 不平等 문제를 다룬다. 5장은 최근 오프쇼어링의 팽창이 勞動市場에 의미하는 바를 가늠하며, 6장에서는 세계화가 福祉國家의 政策, 즉 저소득 집단의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가설을 살펴본다. 마지막 장은 요약과 전망, 정책 함의 검토에 할애한다. 이 모든 측면을 분석할 때 불평등 관련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 2. 大量移民과 勞動市場 統合

### 2.1. 19世紀-新世界로의 大量移住

19세기, 특히 후반은 구세계 즉,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大量移民이 발생한 시대였다. 1820년 이후 100년간 약 6천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 중 60%는 미국에 정착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舊移民'의 출발지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북유럽 순이었고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출신 '新移民'이 뒤따랐는데 이러한 이민은 농촌-도시 간, 유럽 내부 이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이민의 출발-도착지 간의 經濟的 隔差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임금격차로 표출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저렴한 토지, 사회적 평등성, 종교적·시민적 자유 등 '廣義의 經濟的

機會'를 의미한다[이철희(2004, p. 250)]. 부가적으로 이주비용, 이민 배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정도, 인구 증가, 임금 노동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민은 이민을 흡수하는 나라 쪽의 경기 변동으로 노동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주비용이 하락한 19세기 말부터는 逆移民(歸國)도 많아졌는데 그 숫자는 1890~1914년간 미국에 입국한 총 이민의 30%에 달했다. 특히 이탈리아인이나 스페인인의 경우 그 비율은 거의 50%였다. 이들의 귀국 비율은 아르헨티나에서도 1857~1924년간 총 이민의 47%에 달해 이를 가리켜 잠정적, 심지어는 계절적 이민 경향이라고 언급될 정도였다[O'Rourke and Williamson(1999, p. 120)]. 이처럼 단기간 체제하다가 귀국하는 이민은 금전, 시간, 위험을 포함한 대서양 여행비용이 감소한 것에 힘입은 勞動市場 統合의 증거로 해석된다. 이민들은 종종 신대륙에서 획득한 숙련과 정보,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귀국했다[Chiswick and Hatton(2003, pp. 70-71)].

이민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賃金收斂이었다. 이민을 배출한 나라의 임금은 상승하고 흡수한 나라의 임금은 하락하였다. 지주 및 자본가가 부유층이라고 할 때 구세계의 불평등은 완화되고 신대륙의 불평등은 악화된 것이다. 물론 資本移動과 技術進步의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이 노동과 함께 이동하면 위와 같은 효과가 감소할 것이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이민의 출발 도착지를 막론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19세기의 이민으로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임금이 절대적으로 또 국제비교적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미국의 미숙련 임금은 하락하여 대서양 양안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1870~1910년간 임금 격차의 28%, 1인당 GDP 격차의 18%, 노동자당 GDP 격차의 29%가 감소하였다. 여기에 무역의 반응, 생산물 구성의 변화, 자본이동 등을 감안하여 대량 이민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한 一般均衡모델의 反事實的(counterfactual) 결과는 구세계와 신대륙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7% 증가하고 1인당 GDP는 9% 감소하며 노동자당 GDP도 9% 감소했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실제 감소폭과 이 결과를 비교하면 이민의 순효과가 계산된다[O'Rourke and Williamson(1999, pp. 162-163)].

大量移民이 신대륙의 임금 수준을 압박하자 19세기 말부터 이민 흡수국은 이민을 환영 또는 장려하던 분위기에서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다. 1980년대부터 이주정착 보조금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순으로 삭감 또는 폐지되었다. 미국에서는 1882년에 중국인을 배제하기 위해 시작한 이민 제한정책이 1917년에는 모든 아시아인 배제와 문자 해독능력 시험, 1921년과 1924년에는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 출신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쿼터제 등으로 확산되었다. 비슷한 시험제도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브라질에서도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移民規制는 이익집단 유권자들의 정치력과 관련이 있으며 불황기 실업률이 높았을 때 移民制限 입법운동이 심화되었다. 이에 부가적으로 인종차별이나 정치가들의 선동 등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되었다. 이민규제정책이 대량이민에 제동을 걸었음은 물론이다[Chiswick and Hatton(2003, pp. 97-98, 101-102)].

## 2.2. 20世紀-移民網의 擴大

세계화의 2차 물결 시기인 20세기 말의 이민은 19세기 대량이민보다 양적으로 제한되었으며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2차 대전 이후 여행 수단이 선편에서 항공으로 바뀌면서 移住費用이 급감했고 情報通信 費用도 감소했다. 1960년대에 미국, 캐나다, 대양주의 이민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에 힘입어 북미와 오세아니아로의 이민이 꾸준히 늘었다. 1990년대에는 이민 규모가 연평균 100만이 넘어 절대적 숫자로는 19세기 대량이민기와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착지 인구 천 명당 이민을 환산하면 미국의 경우 1900년대에 11.6명에서 1940년대에 0.4명으로 줄었다가 1990년에 4.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大陸 間 移民패턴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첫째, 주요 이민 배출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뀌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 내 이민이 증가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 2차 대전 후 남유럽과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주가 급증했으며 여기에는 '訪問 勞働者' 시스템도 기여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유럽과 남유럽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출신 이민이 증가했고 1990년대에는 구소련 동구권에서 서유럽으로 이민이 늘었다. 1989~1993년 동안 연평균 100만 이상이 EU로 이민했으며 이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둘째, 라틴아메리카는 이민의 도착지에서 출발지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유럽이 이민배출지에서 흡수지로 위상을 바꾼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의 출발지 분포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유럽 출신이 4/5 정도였는데 1990년대에는 유럽인이 1/5 이하로 줄었고 이민의 거의 절반이 멕시코와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 왔으며 아시아계도 30%를 넘는다[Chiswick and Hatton(2003, pp. 74-76)].

20세기 말 새로운 대량이민의 질은 19세기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도착지 임금자료와 교육수준, 출발지 구성, 출발지 평균소득과 불평등도 등에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비용이 낮을수록, 連鎖移民(chain-migration, 먼저 이민 온 가족, 친지, 이웃의 도움을 받아 뒤따라오는 효과)일수록, 출발지의 不平等度가 높을수록 이민의 질이 떨어진다.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은 미숙련 노동시장에서, 복지제도에서 내국인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배척당하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들은 대개의 경우 이주비용이 높고 친지효과가 적으며 출발지 불평등도가 낮아서 양질의 이민이 많다. 이들의 출발지 나라에서는 오히려 ‘頭腦流出’(brain drain)을 걱정하는 것이다[Hatton and Williamson(2005, pp. 319-333)].

미숙련 노동자가 이민했을 때 到着地의 不平等度는 어떻게 되는가. 19세기에 신대륙의 임금이 하락하여 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민과 함께 자본이동이 이민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이 임금하락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이다. 20세기 말에 이루어지는 이민은 이민 도착지의 未熟練 勞動의 임금을 낮추어 熟練 賃金과의 차이(skill premium)를 확대시키므로 不平等이 심화된다. 그리고 이 때 자본이동이 수반되고 자본이 숙련 노동과 보완적이라면 숙련 임금노동의 격차가 더욱 커져서 불평등도도 그만큼 더 상승할 것이다. 100년 전에 비해 요즘은 숙련 격차가 크고 또한 미숙련직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므로 미숙련 노동자의 이민이 내는 효과의 민감도도 역시 높아졌다. 물론 19세기에 비해 농업 부문이 미미하고 토지에 대한 수확체감효과도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시장효과가 감소한 측면은 있다(Williamson(2004), Hatton and Williamson(2005, pp. 304-307)).

다시 말하여 大量移民과 함께 資本移動을 분석해야 이민이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과 불평등도가 변화한 것의 효과를 고찰할 수 있다. 19세기 말의 대량이민 시기에 노동과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要素移動을 감안한 2국 2상품 2요소 모델에 따르면 勞動과 資本은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노동/자본 비율이 수렴하도록 생산요소가 이동하여 상대요소가격을 균등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9세기 말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신대륙으로 자본이 이동하여 신세계의 노동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이민으로 신세계의 노동공급이 늘어난 효과를 일부 상쇄했다. 그러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노동은 신대륙으로 유출했지만 자본은 유입되었음이 확인된다(Hatton and Williamson(2006)).

20세기 이민에는 19세기에 경험하지 못한 몇 번의 外生的 衝擊, 즉 移民의 勞動市場 效果를 뚜렷이 해주는 사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 알제리에서 남부 프랑스 도시들로 90만 명의 이주가 발생했다. 이것이 그 곳 인구의 1.9%를 증가시켜 임금을 1.3% 낮추고 실업률을 0.3% 포인트 높였다. 1974~1976년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60만 명이 포르투갈로 이주하여 이 곳 인구가 7% 증가하고 임금이 5~9% 떨어졌다. 또 1989년에는 러시아유태인 100만 명이 이주가 허용된 이후 5년 동안 이스라엘로 이민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12% 증가시켰으나 이

경우에는 이민의 질적 수준이 높고 자본유입이 뒤따랐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받은 충격은 곧 가라앉았다[Hatton and Williamson(2005, pp. 299-304)].

19세기와 20세기의 移民 效果를 비교한다면 19세기에는 자본이동이 높았음에도 토지와 자연자원이 주요 생산요소였으므로 이민의 賃金 效果가 컸다. 20세기에 와서는 이동 불가능한 요소의 중요성이 줄어든 만큼 이민의 勞動市場 效果가 줄어들었다. 반면 토지와 농업의 비중이 중요한 저개발국에서 이민배출은 임금상승의 효과가 여전히 클 것이 기대된다.

20세기에 와서 더 중요해진 것은 선진국에서 이민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福祉財政이다. 이민의 교육수준이나 숙련도가 높을수록 실업수당이나 연금 지급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며 사회보장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복지국가일수록 그 부담은 늘어난다[Hatton and Williamson(2005, pp. 307-311), Hatton and Williamson(2006)].

### 3. 要素價格 均等化와 國家 內 不平等

要素價格 均等化는 요소이동 없이도 이루어진다. 自由貿易은 상품가격을 世界市場價格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국내가격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비싸진 상품에 特化하게 한다. 무역이 개시되기 이전에 자원 부존도의 차이에 따라 국내에 풍부한 요소를 더 많이 쓰는 상품의 생산비가, 따라서 상대가격이 더 낮았을 것이고(比較優位), 교역이 시작된 이후에는 국제가격이 가격상승의 효과를 내게 되므로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 집약적인 생산물에 특화하는 효과가 있다(Heckscher-Ohlin 정리). 예를 들어 19세기에 호주에서 지대가 낮아 토지집약적인 곡물 생산에, 유럽에서 임금이 낮아 노동집약적인 직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었다고 하자. 양자 간에 무역이 시작되면서 호주에서 곡물가격이 오르고 장기적으로 곡물생산에 특화하게 될 것이다. 특화에 따라 풍부한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풍부한 요소가격이 상승하고 희소한 요소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무역 당사국 간에 요소가격비가 균등화된다(Stolper-Samuelson 정리). 이 예에서는 호주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오르고 유럽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오르므로 양 대륙에서 지대/임금 비율이 수렴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호주에서 지대/임금 비율이 상승하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유럽의 불평등은 낮아진다.

#### 3.1. 19世紀 末-舊世界와 新大陸

세계적 무역은 중세부터, 그리고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商品價格의 收斂 現象이 보이는 것은 1820년대 이후다. 특히 19세기 중엽의 증기선 보급과 철도건설, 수에

즈 운하(1869) 등이 운송비를 혁신적으로 하락시켰으며 냉장기술의 발달과 아시아의 개항 등도 이 면에서 중요했다. 閉鎖經濟라면 상품가격이 국내에서 자원부존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開放經濟하에서는 외생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주어지는데 이러한 일이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리버풀-시카고 간 곡물 가격, 런던-신시내티 간 육류 가격, 리버풀-봄베이 간 원면 가격, 런던-랑군 간 쌀 가격 등을 비롯한 여러 자료가 1870~1913년 사이에 國際價格으로 급속히 수렴하는 것이 보인다. 1820년대까지는 농산물과 제조업품의 가격비가 토지/노동 부존비율로 잘 설명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것이 설명력을 잃는다. 이로써도 이후 상품시장의 통합이 빨라지게 되는 계기를 알 수 있다. 要素價格, 즉 임금/지대 비율도 19세기에는 요소 부존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 비율이 1870~1940년간 신세계에서는 하락, 구세계에서는 상승하는 수렴현상이 보인다. 즉 핵서-올린 정리 자체가 19세기 말의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당시의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전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O'Rourke and Williamson(2002)).

19세기 말에 要素價格이 均等化하는 경향에 따라 신세계의 불평등은 커지고 구세계의 불평등은 감소했다. 여기에는 무역 확대와 특화에 따른 효과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生産要素의 축적과 이동, 그리고 技術進步 덕분에 요소가 절약되는 정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즉 요소 부존도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경작지 확장, 자본축적 등에 따라 변화하며 각각의 양이 늘어나면 요소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또한 요소 부존의 비율을 변화시킨다. 기술진보는 한편으로는 희소요소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구대륙에서는 토지 절약적인 기술혁신이, 신대륙에서는 노동절약적인 기술혁신이 유도된다(*induced innovation*). 장기적으로는 미숙련 노동을 절약하는 쪽으로 향한다.

1875~1914년간 호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7개국의 賃金地代 比率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존자원의 효과, 유도된 기술진보의 요소 바이어스, 농산물/공산품의 상대가격의 효과 등이 임금지대율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준다. 각각의 설명 변수들의 기여분을 나누어 보면 신대륙-구대륙 간 요소가격 수렴의 25%를 교역에 의한 商品價格의 수렴이, 10%를 이민이나 자본이동을 통한 요소 부존의 변화가, 46%를 희소요소를 절약하는 技術進步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ourke, Taylor, and Williamson(1996)).<sup>(1)</sup>

低開發國이 小規模 開放經濟가 될 경우 상품가격 수렴의 효과가 훨씬 크고, 요소가격 균등화가 관찰된다. 1870~1940년간 토지가 풍부한 나라들(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버마,

(1) 최근 연구들을 검토한 한 연구는 20세기 말 미국 내 불평등도 증가의 20%를 국제무역이, 80%를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설명한다고 결론지었다(Fischer(2003, p. 10)).



시암, 이집트, 편자브)과 토지가 희소한 나라들(일본, 한국, 대만)의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相對的 要素價格이 收斂하는 현상은 1914년 이후 역전되었다. 저개발국의 경우 기술진보가 거의 없고 자본축적도 미미했으므로 임금지대 비율은 토지/노동 부존 비율과 농산물/공산품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농산물/공산품 가격비가 상승하였는데 토지가 풍부한 나라에서 더 많이 올랐다. 그 결과 토지가 풍부한 나라의 임금지대 비율은 하락하였고 토지가 희소한 나라의 임금지대 비율은 상승하였다. 무역에 의해서 토지가 풍부한 나라의 불평등도가 심화하고 토지가 희소한 나라의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저개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1914년 이후 무역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반전되었다(Williamson(2002a)).

이민으로 미숙련 노동의 임금이 하락하여 신대륙에서 이민을 규제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실은 이민뿐 아니라 상품무역의 확대,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 등이 移民制限 같은 世界化 後退(backlash)를 가져오는 데 일조하였다. 구대륙 유럽에서는 이민을 배출함으로써, 또한 값싼 곡물을 수입하여, 노동자의 복지는 향상되었을지 모르나 농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이것이 농산물에 保護關稅를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업 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를 꺼려한다. 농산물 시장의 세계적 통합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Williamson(1998)).

### 3.2. 20世紀 末-低開發國과 先進工業國

19세기에 교역상품의 운송비가 혁신적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20세기에는 항공 운임을 빼면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교역의 확대에 貿易政策의 自由化가 중요해진다. 1950년 이후에는 공산품 관세가 선진국부터 낮아지며 후진국은 아직 높고, 農業 保護는 더 강화된다. 그러나 價格收斂 현상이 잘 보이지 않아 세계적인 상품시장 통합의 정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19세기에 구세계에서 賃金地代 比率이 상승하고 신세계에서는 하락한 것처럼 20세기 말에는 熟練 프리미엄이 선진국에서 상승하고 후진국에서 하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예측이 맞지 않고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견 선진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후진국에서 노조에 반감을 가진 정부가 등장한다거나, 값싼 중국 노동력이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든가, 그밖에도 미숙련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인구 폭발, 교육, 민주화, 공산주의의 몰락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O'Rourke(2001)).

중국, 인도,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부상하면서 특히 세계의 노동력이 14.6억에서 29.3

역으로 배증하였다. 이러한 ‘巨大한 倍增’ (Great Doubling)으로 인해 世界의 資本勞動 比率이 60%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여 권력의 균형이 자본 쪽으로 이동했다. 이 결과 임금 경쟁이 되지 않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이들 나라에서 저임금 재화용역 생산을 이용한 발전이 불가능해졌다. 저개발국에는 워싱턴 콘센서스<sup>(2)</sup>가 맞지도 않는다. 反世界化 운동이 심해져서 後退(backlash)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선진국 미숙련 노동자의 반발도 발생한다. 자본노동비율이 급감하는 것에 대응하여 투자증가, 복지정책의 강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Freeman(2006)).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 이전에는 노조가 강하고 누진 소득세 시행, 최저 임금제를 높게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넓게 분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 워싱턴 콘센서스라는 제도적 패턴하에 이 모든 차원에서 역전이 일어나서 國際貿易과 技術進步에 따른 不平等 深化를 부추겼다는 설명이 있다. 즉 미국의 분배상태가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보다 좋지 못할 뿐더러 노동빈민과 중산층을 희생하여 CEO들이 엄청난 소득을 취하고 있고, 직업안정성,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이 줄었으며 교육, 교통, 의료, 여가, 직업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줄었다는 것이다(Levy and Temin(2007)).

저개발국 미숙련 노동자의 지난 30년간 가계조사를 보아도 世界化에 따라 熟練 프리미엄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인도, 홍콩의 1980년대 90년대 자료에 의하면 당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이 확대되고 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났다. 그런데 숙련 프리미엄은 모든 나라에서 증가했다. 중국은 좋아졌을 것 같지만 이 역시 1980년대 90년대 무역 및 FDI 자유화와 2001년에 WTO 가입하는 동안 불평등이 계속 커졌다.

무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의 숙련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1) 저개발국이 미숙련 노동집약적 수출에 특화하더라도 勞動市場이 경직되어 있어서 가격이 상승한 부문으로 노동이 다시 배분되는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때는 임금 조정과 이윤 조정이 나타난다. 즉 가격이 하락한 부문의 이윤과 임금이 떨어져서 경제 전체의 임금 수준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2) 未熟練 勞動節約的 技術進步가 있을 수 있다. 3) 무역 자유화가 실현되기 이전에 가장 크게 보호 받던 부문이 미숙련 노동집약적이었으면 세계화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4) 남미는 중

(2) 미국 정부와 IMF, 세계은행의 지지를 받고 있는 10개 항의 지침으로, 균형재정, 교육 및 보건 관련 지출 우선, 세계개혁(세원확보와 세율인하), 안정적이고 낮은 이자율, 경쟁적 환율, 수입 개방, FDI 개방,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재산권 보호 등을 가리킨다.

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임금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남미의 比較優位가 달라지고 그래서 남미는 세계화 이후 섬유를 수출하던 상황에서 섬유를 수입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했다. 5) 이하 5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반제품 교역과 오프쇼어링의 경우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이 저개발국의 숙련 노동과 숙련도가 비슷할 때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미숙련 과업을 아웃소싱하면 양쪽 모두에게 熟練 集約度를 높이고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에는 미국에서 멕시코,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오프쇼어링 사례와, 선진공업국에서 동남아, 중미, 동유럽으로의 외주 사례 분석 등이 있다. 6) 貿易이 시작되면서 저개발국으로 資本移動이 있고 자본-숙련 간 보완관계가 있으면 미숙련공은 손해를 보게 된다. 7) 貿易 自由化에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효율적인 공장으로 시장지배율이 재배분되면, 즉 생산물의 품질과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숙련 수요가 높아져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8) 단기적인 실업이나 불확실성, 비정규직 존재 등의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Goldberg and Pavcnik(2007)].

저개발도에 따라 世界化의 所得分配 效果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1988년과 1993년의 가구 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국가에서는 경제개방의 수혜자들이 부유한 계층이었다. 이들 나라보다 소득이 좀더 높은 쪽의 나라들, 즉 콜롬비아, 칠레, 체코 등에서는 개방의 상대적 수혜자가 빈곤층이나 중산층이었다. 이는 熟練/非熟練 2要素 模型에 미숙련공보다 더욱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제3요소로 부가한 모델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Milanovic(2002)].<sup>(3)</sup>

#### 4. 國家 間 不平等과 收斂 論議

國家 間 不平等의 문제는 대개 소득이나 임금 격차가 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收斂'(convergence), 또는 여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격차가 결국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條件附 收斂'(conditional convergence)을 보이는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한다. 선진국들만 본다면 1840년대에 '發散'(divergence)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수렴했다가 1860년대에 잠시 주춤한 후 1870~1913년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 이때는 신대륙의 공업화, 자

(3) 이 모델에 자본요소를 더하면 교육을 거의 못 받았거나 매우 숙련된 노동자들을 포함하게 된다. 자본과 광물과 연료가 풍부한 나라에 교역은 불평등을 높이고, 초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 개방은 불평등도를 낮추는 결과가 나온다[Gourdon, Maystre, and de Melo(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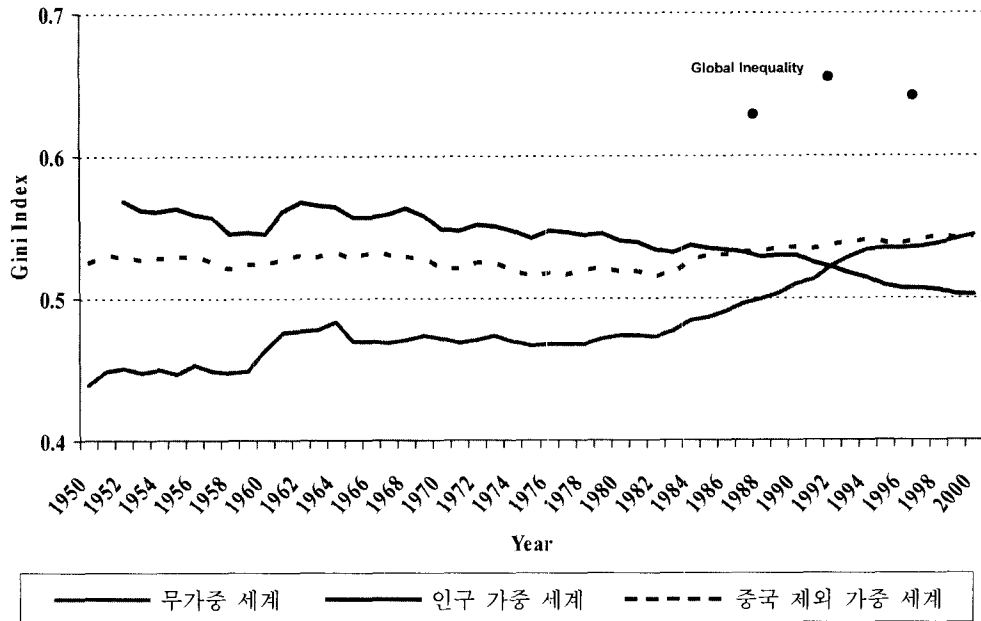
유이민, 제국주의, 금본위제가 기여했을 것이다. 1914~1938년간은 정체, 그 이후 다시 발전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 또 다시 수렴하는 시기가 온다. 이 시기는 신세계 구세계, 북유럽 남유럽 간 격차 해소가 주요인이었다. 기술전파가 수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각 시기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Williamson(1995)].<sup>(4)</sup>

물론 여기에 동유럽이나 제3세계를 넣으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져서 條件附 成長模型이 필요하다. ‘收斂 클럽’에 따라 기술수준과 소득, 임금이 달라지므로 세계적 국가 간 소득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19세기에는 저개발국의 장기적인 탈공업화, 선진국 성장속도의 가속, 20세기에는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주변부의 임금정체,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자본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후진국이 배제된 일, 미숙련 절약적인 기술진보 등이 이러한 不平等度を 높이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그림 1〉 참조, 또 O'Rourke and Williamson(1999, p. 25), Williamson(2002b)].

수렴여부는 ‘分配動學的 接近’ (distribution dynamics)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870~1914년간 OECD 17개 나라들은 수렴이라기보다는 層理化(stratification)했으며 1950~1973년 대호황기 동안 OECD 24개국 간에는 수렴이 있었고, 그 이후 1992년까지의 관찰 결과는 다시 층리화하여 兩極化(polarization)와 발산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50~1998년간 세계 115개국을 관찰한 결과 대호황 기간에도 소득 수렴은 부유한 나라끼리의 일이고 다고봉(multi-modal) 과정이어서 수렴 클럽이 둘 이상이었다. 교역성장 자체가 선진국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방도 자체보다는 어느 나라와 교역하는가가 수렴 클럽에 중요했다. 1973~1998년간에는 두 클럽이 관찰되지만 그 위치가 떨어져 있어 불평등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냈다. 이 기간에는 교역 패턴의 중요성도 줄었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교역 패턴은 부국이 빈국의 상대적 쇠퇴를 수반하면서 성장하도록 유도한 듯 보인다[Epstein, Howlett, and Schulze(2003)(2007)]. 그러나 이 기법은 說明變數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간 불평등의 척도를 1인당 소득의 단순비교, 인구로 가중한 소득의 비교, 가구조사에서 얻은 ‘진정한’ 세계적 불평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1978~1980년을 전환점으로 유가 급등, 이자율 급상승, 외환위기, 중국의 부상, 남미의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동구권 침체 등과 함께 單純不平等度는 높아졌으나 人口加重 不平等度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줄었다. 세계 인구 간의 불평등도는 매우 높으나 방향은 불분명하다[〈그림 2〉 참조, Milanovic(2005)].

(4) 1919~1939년간 반세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갭이 계속 줄었다는 연구가 있다[Milanovic(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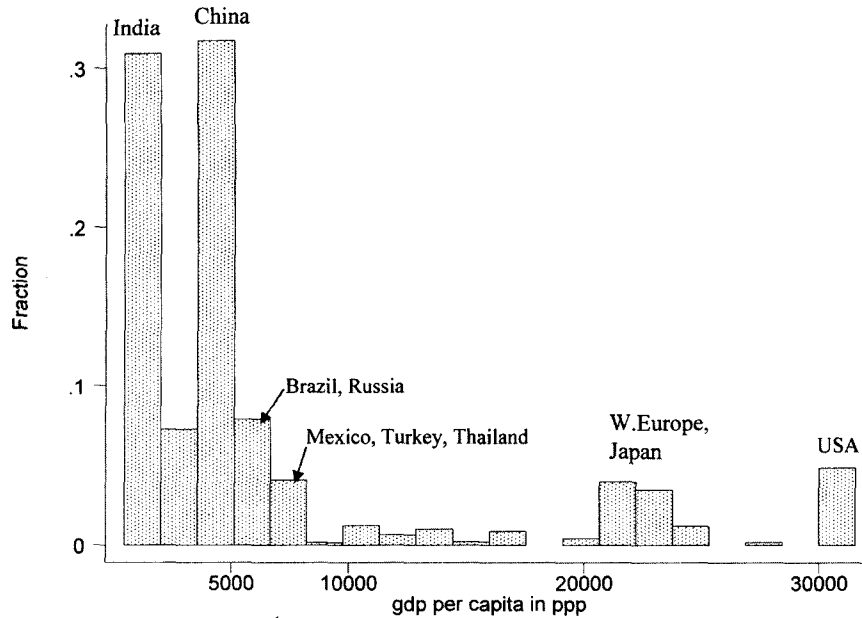
資料: Milanovic(2005, p. 4).

〈그림 2〉 1950~2000의 不平等: 모든 不平等 論議의 어머니

20세기 말에 와서 世界的 不平等을 초래하는 주요 결정요인은 서방세계 선진 공업국의 소득수준과 중국, 인도의 도시소득, 이 두 나라의 농촌소득 등 세 가지의 相互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인도뿐 아니라 기타 아시아국 즉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일랜드의 도시-농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인도의 농촌이나 스리랑카의 가장 부유한 사람도 프랑스의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소득이 낮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말할 필요도 없다. 즉 부국의 소득분포와 빈국, 특히 빈국 농촌의 소득분포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다. 세계인구의 所得分布는 양봉(bimodal)을 넘어 兩極化된 상태로서,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中間 所得層이 없다〔(그림 3) 참조, Milanovic(2006)].

開放經濟일수록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도가 낮아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경제를 폐쇄하면 세계경제에서 뒤떨어진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증거를 볼 때 저개발국에게 무조건 개방하기만 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득할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 선진 공업국들이 나서서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居住國의 1人當 GDP(國際달러)에 따른 世界人의 分布(2000年)



資料: Milanovic(2006, p. 24).

〈그림 3〉 中間層 없는 世界

### 5. 오프쇼어링의 膨脹과 勞動市場 展望

1980년대 경부터 생산의 수직적 분업과 반제품 교역, 그리고 아웃소싱, 오프쇼어링이 괄목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sup>(5)</sup> 1817년에 리카아도(D. Ricardo)가 영국의 양모와 포르투갈의 포도주를 예로 들어 比較優位論을 정립하고 완제품을 대상으로 특화와 교역을 설명했지만, 2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진보에 힘입어 생산과정이 분할되고 재화와 용역 생산에 필요한 여러 課業(tasks)의 공급망이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새로운 설명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완제품이 아니라 ‘課業’ 자체가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오프쇼어링, 또는 課業交易의 예를 들자면 1998년 WTO 연차보고서에서 어떤 ‘미

(5) 생산과정의 일부를 외부에 발주 또는 하도급하는 것을 아웃소싱, 해외지사에게 맡기는 것을 오프쇼어링, 외국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오프쇼어 아웃소싱이라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여러 용어를 느슨하게 혼용하고자 한다. 한편 도급받는 경우는 insourcing, inshoring으로 지칭하여 따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된다[Kirkegaard(2007)].

국 차' (GM대우)의 생산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의 37%만을 미국이 담당하고 30%에 해당하는 조립작업은 한국에서 행하며 17.5%의 부품과 기술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부가가치의 7.5%인 디자인은 독일에서 조달하며 4%에 해당하는 소부품은 대만과 싱가포르에 발주한다. 영국이 맡는 광고와 마케팅이 2.5%, 아일랜드와 바베이도스에서 수행하는 자료처리가 나머지 1.5%를 차지한다.

오프쇼어링 비용이 줄어들에 따라 향후 勞動市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우선 주어진 요소가격, 생산수준, 생산기술하에 해외에서 값싸게 수행될 수 있는 과업만 골라 해외노동으로 국내노동을 대체하므로 특정과업관련 노동이 초과공급되고 이에 따라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이 늘어난다. 아웃소싱은 勞動擴張的(labor-augmenting) 技術進歩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課業交易은 요소가격 균등화를 더욱 가속시킨다. 그리고 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한다고 해서 외주 가능한 노동자를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 [Feenstra(1998)].

오프쇼어링 팽창의 두 번째 효과는 외주과업의 비용하락으로 그 과업을 생산과정에 포함하는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相對價格 效果이다.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직물부문에서 미숙련노동집약적인 방적직포 과업을 저개발국에 오프쇼어링한다면 직물가격이 내리고 직물업종사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다. 임금하락의 정도는 저개발국의 제도개혁, 기술진보, 노동시장 상태에 달렸다.

세 번째, 아마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효과는 外注課業의 生産性 效果로서, 즉 노동확장적 기술진보의 효과와 비슷하게 임금이 하락하고 생산물 상대가격이 하락한 결과 그 부문의 규모가 커지면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늘어나며 오프쇼어링이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산업전체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숙련과업 오프쇼어링의 기회가 향상되는 것이 미숙련공의 생산성 증가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한다. 환경에 따라서는 이것이 勞動供給 效果와 相對價格 效果를 상쇄하고도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Grossman and Rossi-Hansberg(2006)].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업교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세계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 보는 자를 생산부문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 유용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課業'은 광범위한 생산물 부문에 존재하며 오프쇼어링은 숙련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은 외주 불가능하지만 전화 응답 서비스는 오프쇼어링이 가능하다. 새로운 점은 오프쇼어링에 의해서 세계화의 효과가 豫測不可能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상품과 요소교역이 팽창하는 세계화의 1차, 2차 물결, 즉 '첫 번째 大 解體'(great unbundling)의 효과는 생산의 집적 및 분산, 부문별 또는 기업 간 경쟁, 숙련도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 등, 표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에 대응할 전략에 관한 권고사항도 비교적 단순했다. 그러나 오프쇼어링의 급성장으로 표현되는 '두 번째 大 解體' 시기에는 외주 불가능한 과업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도에 불문하고 일상적(routine)인 과업인가, 단순한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오프쇼어링 가능성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여 첫 번째 대 해체기에 세계화의 효과는 풍부한 생산 요소가 이득을 얻고 희소한 생산 요소가 손해를 본 반면, 두 번째 대 해체기에서는 交易 可能性, 外注 可能性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세계화에 대처하는 전략은 교육과 숙련취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상적이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능력, 전혀 새로운 과업에 적응할 신속성과 순발력 그리고 창조력과 상상력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정책적으로도 기업이나 산업, 숙련도별 그룹을 대상으로 보호정책, 복지정책을 마련하기보다 개개인을 대상으로 과업별 조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職種보다는 勞動者'를 보호할 것이다[Baldwin(2006)].

즉, 특정 산업이 國際競爭으로부터 보호받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떨어질 수 있다. 한 추계에 따르면 2004년 미국의 1억 3천만 노동자 중 5천만 명 정도가 수행하는 과업이 오프쇼어링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세계화에 대응해야 할 사회안전망은 폭이 넓고도 질을 따져 준비되어야만 한다[Blinder(2006)].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는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 신뢰성 있는 공식기록이 없는 가운데 이에 관해 그나마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2004~2005년간 해고 관련 표본의 4%만이 오프쇼어링과 관련된 구조조정이었다. 2005년 4사분기에 7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대신 800만 개가 새로 생겼다. 유럽연합 15개국에서 2002년 이후 없어진 일자리 표본의 4.5%만 오프쇼어링되었다. 오프쇼어링이 평균보다 많은 나라는 핀란드,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등으로 이들의 경우 지역적이거나 국가적 특수성의 이유 때문이고 勞動市場 柔軟性的 정도와는 관련이 없다. 덴마크처럼 노동시장이 신속적인 小規模 開放經濟는 미숙련 오프쇼어링보다 고숙련 인쇼어링이 더 많아 純效果는 긍정적이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저임금 고용감소의 상당부분을 고임금 고용증대로 상쇄하므로 순효과는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오프쇼어링의 팽창으로 저개발 아시아국의 고용증가 효과가 컸던 것도 아니다. 인도의 IT산업 일자리 창출은 해외 다국적 기업이 아닌 현지의 인도회사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수출기업보다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의 고용창출이 컸다. 未熟練 勞動節約的 技術進步로 인해 고용기회와 임금상승의 혜택은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저개발국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양자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하며 제조업 수출을 강조하기보다 국내 서비스 경제를 상승시키는 일에 초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된다 [Kirkegaard(2007)].

## 6. 福祉國家의 危機?

1990년대부터 先進 福祉國家에서 세계화를 지나치게 추진하고 國際競爭에 과다 노출되자 비용절감을 위해서 社會的 支出을 축소하도록 압박받는다는 설이 많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쟁의 가속, 규제철폐 등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경제가 불안해져서 나머지 다른 수단으로 사회적 보호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오히려 국가의 福祉支出을 늘여야 함에도 말이다[Mishra(1999, ch. 1)].

그러나 복지국가가 전부 선진국들이므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보인다. 복지예산 삭감요구에 저항하면서 개방을 추진한 나라들(open resisters), 즉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경제개방도를 낮추었다. 이들은 비용을 절감한 나라들(closed retrenchers),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보다 1980년대 1990년대에 성장은 비슷하면서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면에서 성과가 더 좋았던 것이다. 복지지출도 줄지 않았다[Kite(2004, pp. 229-234)].

스웨덴이 1970년대 후반 이후 약간 좋지 않아 보였던 것은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고집해서가 아니고 재정·금융 팽창을 추진하면서 固定換率을 고수한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지출이나 노동시장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자리 창출, 특히 여성 고용은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이다. 스웨덴은 1998년의 연금개혁으로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게 했다. 결국 스웨덴 특유의 모델이 포기된 것이 아니며 민주적 정부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다 [Lindert(2004, ch. 11)].

그런가 하면 低開發國의 福祉豫算 문제도 구공산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연원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고령자, 실업자, 빈곤층보다 군인, 공무원 연금에서 애로가 온다. 남미, 특히 브라질이 대표적 예다. 브라질은 노동자, 농민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상공인 계층에 혜택을 주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2020년까지 삭감할 나라는 성장도 하지 않고 평균수명도 늘지 않고 민주화도 되지 않는 '問題國家'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Lindert(2006)].

이런 곳에는 賃金硬直性 때문에 세계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최저소득을 보장하기보다 임금 보조가 대안일 수는 있다[Sinn(2007)].

## 7. 後 記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世界化는 19세기 말에도 20세기 말에도 꾸준히 국가 내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을 상승시켜 왔다. 이것이 세계화 때문이 아니고 技術進步의 요소바이어스 때문이라는 주장이 강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구분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특히 요즈음처럼 아웃소싱이 확산되고 있을 때는 그러한 구분은 더욱 무의미하다. 또한 상품교역이나 자본이동이 주로 선진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世界的인 所得收斂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더욱이 FTA 등 地域主義가 만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부추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직업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같은 직종에 오래 머무는 노동자일수록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임금하락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세계화는 너무 많이 진행되어 중단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와서 閉鎖經濟와 블록경제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든, 세계적으로든 세계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집단에게 사회적 이전지출을 어느 형태로든 해주어야 한다. 상대적 손실을 事前的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에 노력을 경주하라고 권고한다. 첫째, 技術革新과 일자리 창출, 둘째, 노동시장에서 이동성 증진, 셋째, 고용 중심의 사회정책, 넷째, 넉넉한 최저임금과 賃金補助 등이 그것이다[Kirkegaard(2007, ch. 3)]. 事後的 보정을 위해 국내에서는 勤勞와 福祉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민주적 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나 초국적 NGO 등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세계평화를 유지하기에 불안해 보인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5

팩스: (02)886-4231

E-mail: dyang@snu.ac.kr

參 考 文 獻

- 이철희(2004): “세계화와 국제 노동이동: 대량 이민 시대의 미국이민,” 『경제논집』, **43**, 1·2, 239-268.
- Baldwin, Richard(2006): “Globalisation: The Great Unbundling(s),” Economic Council of Finland, Sep.
- Blinder, Alan(2006): “Offshoring :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 Bordo, Michael D., Jeffrey G. Williamson, and Alan M. Taylor (eds.) (2003): *Glob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swick, Barry R., and Timothy Hatton(2003):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Integration of Labor Markets,” in M. D. Bordo, A. M. Taylor, and J. G. Williamson(eds.), *Glob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pstein, Philip, Peter Howlett, and Max-Stephen Schulze(2003): “Distribution Dynamics: Stratification, Polarization and Convergence among OECD Economies, 1870-1992,”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0**, Jan.
- \_\_\_\_\_(2007): “Trade, Convergence and Globalization: The Dynamics of the International Income Distribution, 1950-1988,”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4**, January.
- Feenstra, Robert(1998): “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 Glob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Fall.
- Fischer, Stanley(2003): “Globalization and Its Challenges,” *AEA Papers and Proceedings*, **93**, May.
- Freeman, Richard(2006): “The Great Doubling: The Challenge of the New Global Labor Market,” paper given at a Bruegel Economic Policy Seminar, Sep. 12.
- Goldberg, P. K., and Nina Pavcnik(2007): “Distributional Effects of Glob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12885**, February.
- Gourdon, Julien, Nicolas Maystre, and Jaime de Melo(2006): “Openness, Inequality, and Poverty: Endowments Matte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981**, August.
- Grossman, Gene M., and Esteban Rossi-Hansberg(2006): “The Rise of Offshoring,” FRB Kansas City, Aug.
- Hatton, Timothy, and J. G. Williamson(2005): *Global Migration and the World Economy: Two Centuries of Policy and Performance*, The MIT Press.

- \_\_\_\_\_(2006): “What Determines Immigration’s Impact? Comparing Two Global Centuries,” NBER Working Paper, **12414**, July.
- Kirkegaard, Jacob Funk(2007): “Offshoring, Outsourcing and Production Relocation: Labor-Market Effects in the OECD Countries and Developing Asi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07-2**, April.
- Kite, Cynthia(2004):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Welfare State,” in Bo Södersten(ed.),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algrave Macmillan.
- Levy, Frank, and Peter Temin(2007): “Inequality and Institutions in 20th Century America,” NBER Working Paper, **13106**, May.
- Lindert, Peter(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2006): “What is Happening to the Welfare State?,” in Paul Rhode, and Gianni Toniolo(eds.), *The Global Economy in the 1990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4-262.
- Lindert, Peter H., and Jeffrey G. Williamson(2003): “Does Globalization Make the World More Unequal?,” in Bordo, Williamson and Taylor.
- Milanovic, Branco(2002): “Can We Discer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in Income Distribu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876**, August.
- \_\_\_\_\_(2005): *Worlds Apart: Measuring International and Global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2006): “Economic Intergration and Income Convergence: Not Such a Strong Link?,”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 Nov.
- Mishra, Ramesh(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Edwar Elgar.
- O’Rourke, Kevin H.(2001):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Historical Trends,” NBER Working Paper, **8339**, June.
- O’Rourke, K. H., A. M. Taylor, and J. G. Williamson(1996): “Factor Price Convergenc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7**, August.
- O’Rourke, K. H., and J. G. Williamson(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The MIT Press.
- \_\_\_\_\_(2002): “When Did Globalisation Begin?,”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6**, April.
- Sinn, Hans-Werner(2007): “The Welfare State and the Forces of Globalization,” NBER Working Paper, **12946**, March.

Williamson, J. G.(1995): “The Evolution of Global Labor Markets Since 1830: Background Evidence and Hypothese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2**.

\_\_\_\_\_(1998): “Globalization, Labor Markets and Policy Backlash in the Pa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4**, Fall, 51-72.

\_\_\_\_\_(2002a): “Land, Labor and Globalization in the Third World, 1870-194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 March.

\_\_\_\_\_(2002b): “Winners and Losers over Two Centuries of Globalization,” NBER Working Paper, **9161**, September.

\_\_\_\_\_(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World Mass Migration: Comparing Two Global Centuri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ay.